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에 걸릴라” 광주·전남 지자체 정책 홍보 고심

송년사 불가능·신년사 가능 등
자치구 선관위마다 해석 제각각
‘치적 홍보’ 영암군 직원들 입건
온·오프라인 ‘이중 잣대’ 지적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150여 일 앞두고 정책·자치단체장 홍보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특정 사안을 놓고도 의뢰기관별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위법 논란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대응 방안을 찾느라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 행보 뿐 아니라 직원들 신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식으로 모든 사안을 선관위에 의뢰하면서 ‘검열 정책’으로 소극적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5개 자치단체는 30일 자치구별 단체장 송·신년사 배포 과정에서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광산구의 경우 선관위 해석을 바탕으로 구정장 송·신년사를 일반 지역민에게 배포하는 한편, 구청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했다.

반면, 남구는 선관위 해석을 받아 구청 홈페이지

에만 게시했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선관위 답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남구 입장이다.

같은 선관위더라도 광산구는 ‘문제없다’, 남구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이들 선관위가 적용한 법 규정도 선거법 86조 5항으로 같지만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동구도 달랐다. 이들 자치단체는 ‘송년사는 불가능’, ‘신년사는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했다. 서구는 배포하더라도 내용에 구의원 등 특정 이름을 빼고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

이러다보니 재산을 준비 중인 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인데도 선관위별로 해석이 다르니 ‘선관위 맘대로’라는 말이 안 나오겠냐”면서 “선관위 검열 정치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소극적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암군의 경우 지난 21일 군청 홍보실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입건됐다. 지난 6월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

급 포상 패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 26곳에 제공한 게 화근이었다.

군청 정책과 무관한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라는 게 경찰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차라리 선거 압박해서는 정책이나 자치단체장 활동 상황을 아예 내놓지 말자는 말도 나온다. 지역민들에게 자치단체 주요 정책 추진상황과 자치단체장이 어디를 돌아다니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는 것이 기본인데도, 선거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당하기 두려워 아예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선거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온라인 선거 운동에 대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선거운동 비중이 커지는데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SNS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는 것으로, 공약 홍보물만 보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수량조차 엄격히 규제하면서 SNS를 활용한 홍보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정치인들 얘기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마다 신년사에 사용한 문구가 다르다보니, 사업계획이나 실적을 놓고 허용 여부를 선관위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 한다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전남지역 일반 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이뤄졌던 경찰의 암행순찰이 진행된다.

전남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전남지역 일반 도로에 투입,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사이렌·캠코더 등 경찰장비가 내장된 상태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

통법규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차량이다. 전남청은 특히 암행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하고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 과속 차량에 대한 즉각적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남청은 많은 지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과속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남청은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해 운전하는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도로의 경우 고정식 단속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했지만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은 암행순찰차 도입이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 투입, 시내 모든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중이지만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새해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검 “영상 녹화 조사 적극 시행하라” 지시

새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이 30일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검은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소 전이나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정규(형사소송법 184조)나 증인신문정규(형사소송법 221조의2)를 활용하라고 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사건의 유형과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피신조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라고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관처럼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정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범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형사소송법 316조)를 쓰도록 했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의 입증이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전하는 것이므로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상황이 담긴 영상녹화물과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랑의 온도탑 올려주세요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온수가 83.4도인 35억12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42억 1000만원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5명 코로나 확진

일부 수사 지연 불가피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방역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소속 직원 3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경찰관 확진자와 식사한 남부경찰서 직원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가 하면, 광주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오는 등 5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원 5명이 연이어 확진되면서 동료 직원 수십 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상태로, 광주청 소속 직원 중 자가격리자는 51명에 이른다.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간부와 직원 14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남부서 소속 직원 35명도 자가격리 중이다.

광주청 반부패 수사대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부 수사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지구대원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남부서 모 지구대는 인력을 지원받아 3교대로 운영해 처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h1>010-6670-9800</h1>			